

#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06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	제출연월일	2019.04.30.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경석

## I. 제안내용

###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정의 및 활동지원급여 등 정의 개정 (안 제2조~제3조)
- 나.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보호자 등 용어 개정 (안 제4조~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0조)
- 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용어개정 (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2)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9. 3. 14. ~ 4. 3.)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 없음

## II. 검토 의견

### 1. 조례 개정의 배경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 하여 실시하도록 지난 2017.12.19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 또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 하여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직업적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18.12.11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개정되었음.

- 이러한 배경하에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 관련 복지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 개정 내용

### 1) 조례의 제명 변경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1호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한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한 것임.

### 2) 용어의 변경(안 제1조~6조, 제9조~11조, 제13~14조, 제16조, 제20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 가족대표’를 ‘장애인 가족대표’로 용어를 각각 변경함.

### 3) 근거법령 변경(안 제3조)

- 장애인활동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에서 같은 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로 변경함.

### 4)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보조인 관련 규정 변경·삭제(안 제7조, 제8조)

- 지난 2009.12.2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를 상위법령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였으나, 2011.1.4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에 근거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 중 일부 사업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현행 조례 제7조(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및 지원)에 근거한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성격이 복지서비스로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대체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 조례 제8조(활동보조인)의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명칭을 개선하는 등 활동지원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관련 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에 제8조 전체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

####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기준 변경(안 제12조)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장과 센터 종사자 관련 규정 중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과 상충되는 일부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

### Ⅲ. 참고자료

#### 1.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들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③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활동지원사)

-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2조(장애인 등록)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 3.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 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